

제95호(2014. 10. 10.)

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, 정책적 시사점

김미복 박성재



1. 문제 제기	1
2. 규모화의 진전과 농가소득	4
3. 전문화 · 겸업화와 농가소득	8
4. 농가 노령화와 소득격차의 심화	10
5. 농가경제의 안정성	12
6. 정책적 시사점	16

감 수	박준기 연구위원	02-3299-4173	jkpark@krei.re.kr
내용 문의	김미복 연구위원	02-3299-4323	mbkim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 선임전문원	02-3299-4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요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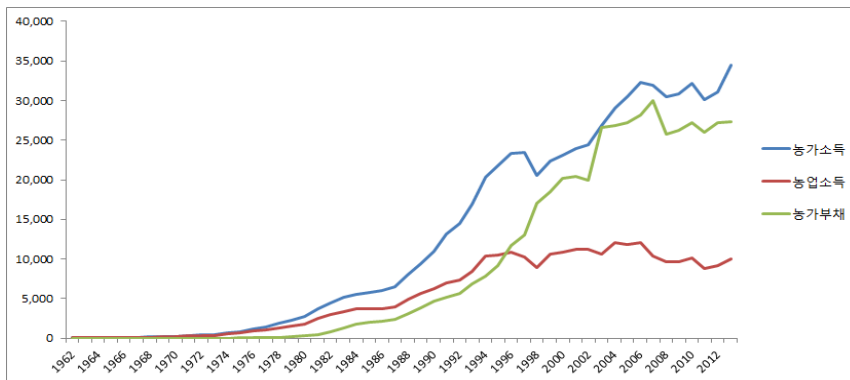
-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1.3% 증가한 3,452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소득의 반등 신호로 보는 기대감 형성
 - 2013년 농가경제통계는 5년마다 변경되는 표본의 첫 번째 연도의 통계라는 점에서 농업구조변화가 반영된 소득의 반등으로 해석 가능
- 2000년대 들어 영세농과 대농의 증가, 농가의 초고령화, 단독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수도작에서 축산, 과수, 채소, 특작 등으로의 작목 전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농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2013년 농가경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
- 농업총조사(2000년, 2010년)와 농가경제조사결과(2003년, 2013년)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사이의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변화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 - 규모화 정책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는 확대되었으나 7ha 이상의 대농 그룹에서 소득정체 현상이 나타나 쌀농업과 위험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
 - 전업농이 감소한 만큼 2종 겸업농이 증가하면서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
 - 농가의 노령화와 경영위험의 증가 등으로 빈곤층 농가의 누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필요
 - 일시적 영농실패 때문에 빈곤층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 농가를 제외하면 40~50대의 절대빈곤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여 일시적 영농실패로 인한 40~50대 절대빈곤 농가가 증가하여 리스크 관리와 경영회생 지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
 -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요 경영규모와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화 정책과 병행한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강화 필요

1. 문제 제기

□ 농가소득 반등과 기대

-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11.3% 증가한 3,452만 원으로 발표되면서 소득 정체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타남
 - 2013년 소득은 2012년 대비 약 350만 원, 2003년 대비 약 740만 원이 증가한 금액
 - * 2,678만 원(2003)→3,103만 원(2012)→3,452만 원(2013)
- 농가소득은 2005년 3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 2012년까지 3천 1백만 원대 이하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정체의 장기화가 우려되었음
 - 농업소득은 1995년 1천만 원대로 진입하여 완만한 상승 끝에 2006년 1천 2백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하강(2012년 912만 원)

그림 1. 농가소득 · 농업소득 · 농가부채 장기추이



자료: 통계청 농가경제조사(www.kosis.kr)

□ 농업 ·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농가경제

- 농가소득의 오랜 정체는 시장개방 등 경쟁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의 수익성 악화 등 산업적 요인과 함께, 농업 · 농촌의 사회경제구조 변화 역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
 - 농업소득의 성장이 멈춘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 등으로 농업투입재 가격이 농산물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되었음

“
2013년 농가소득은
전년대비 11.3%
증가한 3,452만
원으로
오랜 정체가 탈피에
대한 기대

”

“

농가경제조사의
시계열 단층현상은
5년 사이의 농업구조
변화를 반영

”

- 2000년대 들어서도 정부의 정책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규모화, 전문화, 겸업화와 함께 농가의 노령화와 영세농 집적 현상이 지속되어 옴
 -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2000년 1.7%에서 2010년 3.4%로 배증하고, 전업농 비중이 줄어든 만큼 2종 겸업농이 늘어나는 한편에서는 70세 이상이 농가 경영주의 최빈치로 되고, 0.5ha 미만의 영세농은 31.8%에서 40.1%로 증가
- 다양한 방향으로의 농업구조변화와 함께 진행된 소득정체 현상은 평균 농가 개념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
 - 농업의 규모화와 겸업화는 소득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농가의 노령화와 영세농의 집적은 평균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

▣ 농가경제 통계의 단층 현상과 농업구조 변화

- 농가경제 통계를 보면 표본이 바뀌는 5년 마다 통계치가 크게 변하는 단층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
 - 농가경제조사는 농업구조를 반영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최근의 농업총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하여 5년 주기로 표본을 변경(2013년 표본 2,600 호, 2003년 표본 3,200 호)
 - 최근 발표된 201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2010년 농업총조사를, 2003년 농가경제조사는 2000년 농업총조사 기초하여 표본 설계
- 농가경제조사의 통계의 시계열 단층현상은 5년 사이의 농업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
 - 통계치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통계조사의 기술적 오차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, 표본 변경에 따른 농가의 경영규모, 지대별 표본의 분포변화가 통계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농업구조가 새로운 표본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
 - 0.5ha 미만 표본: 14.8%(2003) → 23.9%(2013), 도시근교 표본: 3.6% → 4.3%
 - 동일 표본이 유지되는 5년 동안은 같은 농가의 경제 상황 변화를 의미하고, 5년 마다 바뀌는 새로운 표본의 통계는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

□ 2000년대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

- 농업총조사(2000, 2010년)를 이용 농업·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농가경제조사(2003, 2013년)의 변화 방향과 유형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- 구조변화의 측면에서는 규모화, 전문화, 겸업화, 노령화 정도를 분석하며, 이와 관련하여 농가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농가경제의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함

“

2000년대의
농업구조와 농가경제
변화를 분석하여
정책적 시사점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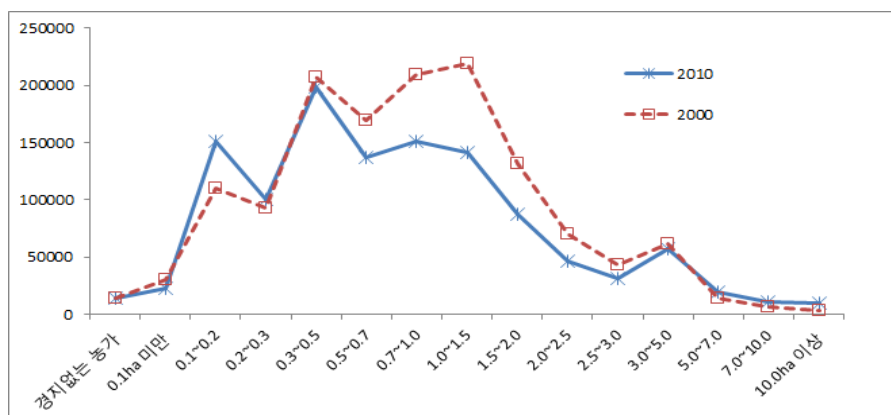
”

2. 규모화의 진전과 농가소득

□ 대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

-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으로 “규모화”는 크게 진전되었으나 0.5ha 미만의 영세농층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됨
- 대농과 영세농의 증가한 반면 중간 그룹 농가(0.5ha~5ha)의 비중은 크게 저하되었음
 - 경지규모가 5ha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.7%에서 2010년 3.4%로 증가하였고 0.5ha 미만 농가는 31.8%에서 40.1%로 증가하였음
- 농산물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 농가와 500만 원 미만 농가가 증가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감소하였음
 - 농산물 판매액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2000년 6.5%에서 2010년 12.9%로, 500만 원 미만 농가는 48.2%에서 53.1%로 증가하였음

그림 2. 경지규모 분포의 변화



자료: 통계청 농업총조사(www.kosis.kr)

- 경영규모가 큰 농가의 증가는 그동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, 영세농의 증가는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과 영농을 취미 또는 부업으로 생각하는 그룹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
 - 고령화에 따른 영농규모 축소, 취미 또는 은퇴후 전원생활을 위해 신규 진입한 귀농·귀촌가구 증가는 0.5ha미만의 영세농층 증가를 유발

“
농업경쟁력 강화를
위한 규모화
정책으로 대농
증가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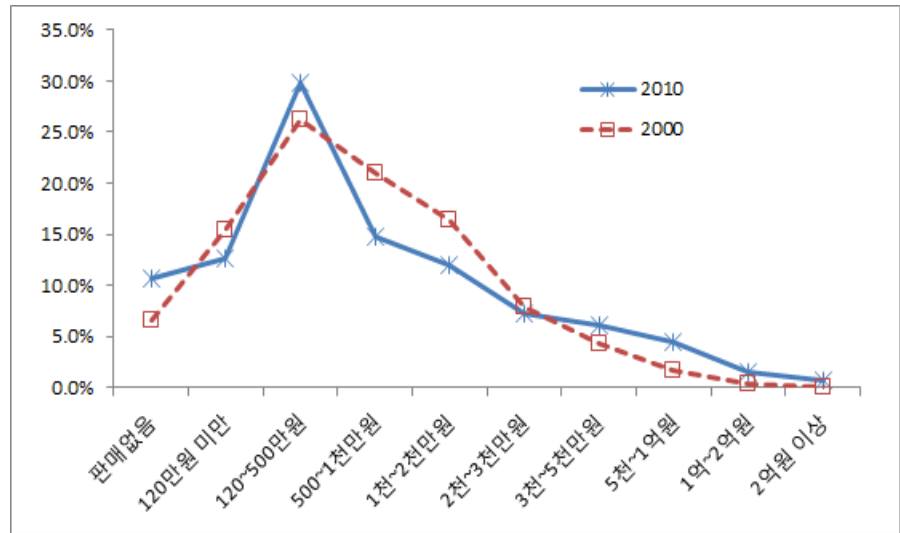


“

경지규모별로 본
2013년 농가소득은
2003년에 비해
7~10ha 구간을
제외하면 대부분
구간에서
상승하였지만
속도차이가 존재

”

그림 3.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분포(비중)



자료: 통계청 농업총조사(www.kosis.kr)

□ 규모화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는 7ha에서 최대

- 10년(2003~2013년) 사이에 경지규모별 농가의 소득은 대부분 상승하였지만 증가 속도는 경지규모별로 차이를 보여줌
- 비교적 영농규모가 큰 3.0~5.0ha, 5.0~7.0ha 그룹은 총소득이 크게 상승하였지만, 대규모 농가 그룹인 7.0ha 이상의 계층에서는 소득 증가가 미진하였음
 - 5.0~7.0ha 그룹은 2003년 3,470만 원에서 2013년 5,660만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7.0~10.0ha 그룹은 5,090만 원에서 4,500만 원으로 하락
- 농업소득을 제외한 비경상소득, 이전소득, 농외소득은 경지규모 증가 속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농업소득이 농가소득 변동의 주요인임을 보여줌
 - 특히, 5.0~7.0ha 농가의 농업소득은 40.1% 증가하였지만 7.0~10.0ha 농가는 38.1% 하락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였음
 - 이는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들의 경영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줌

- 경영규모의 변화에 따른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 증감에 대한 표본설계 변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옥사카 분해법으로 분석한 결과 2003~2013년의 명목소득 증가분 약 740만 원 중 경지규모의 변화는 65만 원의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

옥사카(Oaxaca) 분해:

전체 표본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동일한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을 추정한 결과에 근거하여 두 그룹 간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분해하는 방법임. 옥사카에 따르면 두 그룹 간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는 두 개의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음. 하나는 독립변수들의 값 자체가 두 그룹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으며,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의 값이 동일하다 해도 그것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였음. 가령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이 서로 다른 생산방식, 즉 다른 생산기술(즉 생산함수 자체)을 채용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요소(노동, 자본 등)의 투입량을 달리 할 때 각 생산방식의 차이의 효과를 분리하는 것임. 이 경우 두 기업의 생산물 차이를 생산요소 투입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과 생산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옥사카 분해임(최필선·민인식 2010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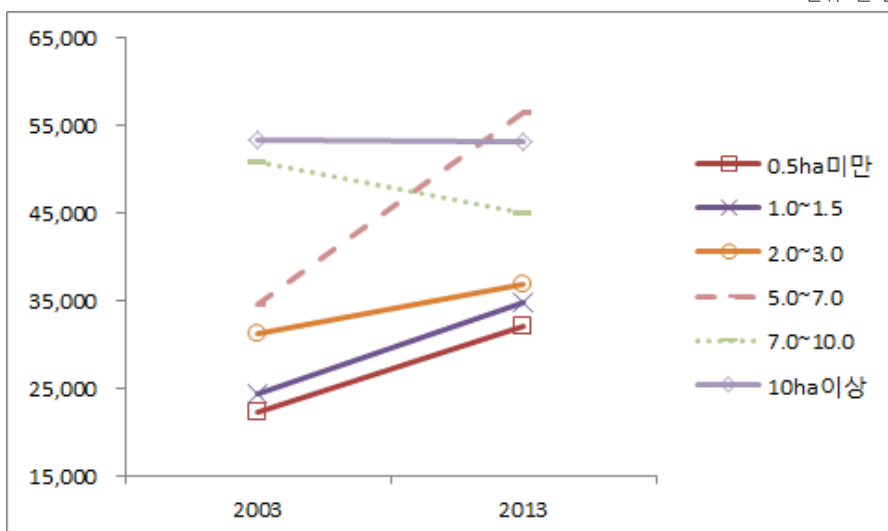
“

표본설계 영향을
고려했을 때
경지규모 변화는
65만 원의 소득
증가에 기여

”

그림 4.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변화(10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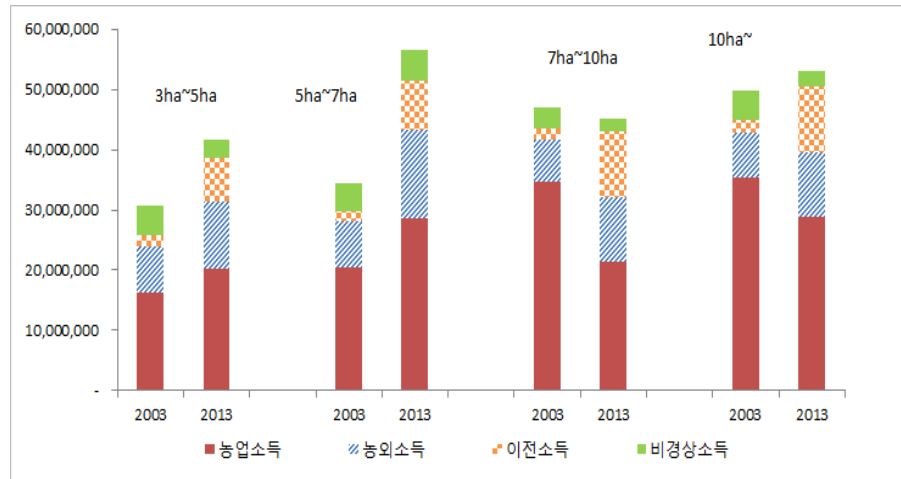
단위: 천 원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

그림 5. 농가소득 증가 및 하락 경지규모 구간의 소득 구조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“

논벼농가의 비중이
높은 대농그룹의
소득하락폭이 커

”

□ 규모화된 쌀전업농의 소득 정체가 두드러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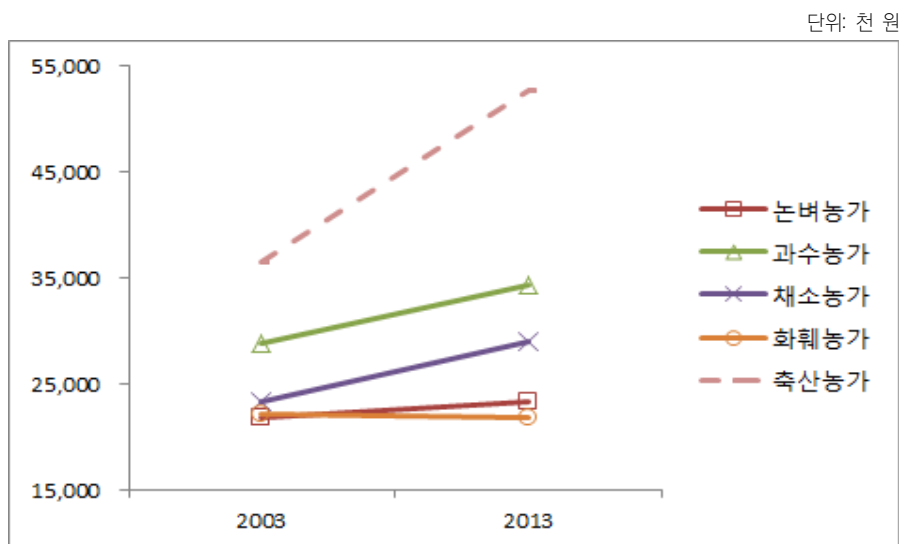
- 경지규모 7ha 이상 대농들은 주로 논벼농가들인데 이들의 소득이 하락 또는 정체되었다는 것은 쌀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시사
- 경지규모 7~10ha와 10ha이상 농가의 소득변화 차이는 표본 중 논벼농가의 비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
 - 10년 사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7~10ha 농가 중에서 논벼농가의 비중은 2003년 42%에서 2013년 40%로 2% 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나, 소득이 다소 증가한 10ha 이상의 농가 중에서는 논벼농가가 54%에서 29%로 25% 포인트나 감소함
- 소득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경지규모 5~7ha 농가들은 논벼농가의 비중이 줄면서 축산, 채소농가의 비중이 증가
 - 논벼농가의 비중은 2003년 45%에서 2013년 30%로 줄었으나,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축산농가는 7%에서 20%로, 채소농가는 17%에서 18%로 증가하였음

3. 전문화 · 겸업화와 농가소득

□ 농업수익성에 따라 영농형태별 농가의 분포 변화와 소득 차이

- 2000~2010년 사이 영농형태별 농가의 증감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 수익성을 쫓아 농가의 작목전환이 활발했음을 보여줌
 - 논벼 33.6%, 특용작물 25.5%, 채소 6.1% 감소하였으나 화훼 130.3%, 과수 18.7%, 축산 농가는 12.4% 증가
- 영농형태별 농가의 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13년에 품목별 편차가 확대되었음
 - 축산농가의 소득은 3,660만 원에서 5,270만 원으로 44.0% 증가한 반면, 화훼농가는 2,220만 원에서 2,190만 원으로 1.4% 하락
- 영농형태별 농가의 10년간 농가소득 변화의 주 요인은 농업소득의 증가 또는 하락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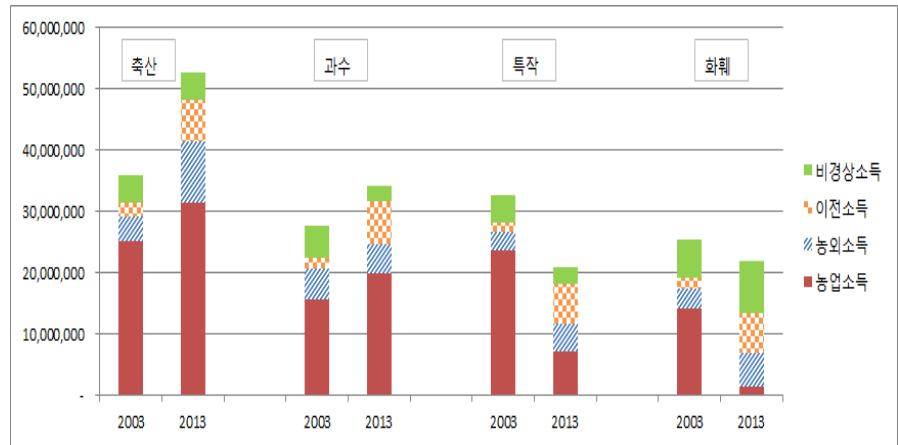
그림 6.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(10년간)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“
축산농가의 소득이
44.0% 이상
증가하는 등
영농형태별 소득변화
차이가 확대되었고
이는 농업소득의
차이 때문
”

그림 7. 농가소득 증가 및 하락 품목의 소득 구조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,kostat.go.kr)

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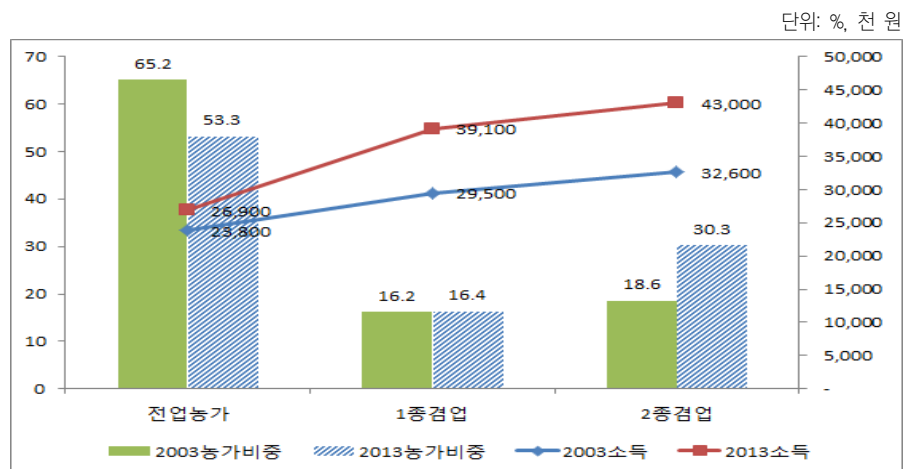
전업농의 비중
감소만큼 2종 겸업농
비중 증가, 이들의
소득 격차는 확대

”

□ 전업농의 비중이 줄고 2종 겸업농의 비중이 커지는 겸업화가
평균소득 증가를 유인

- 농업소득 의존적인 전업농은 2000년 65.2%에서 2010년 53.3%로 11.9% 포인트 줄었고,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2종 겸업농의 비중은 18.6%에서 30.3%로 11.7% 포인트 증가
- 전겸업별 농가의 소득의 크기는 2종 겸업농, 1종 겸업농, 전업농 순이나 10년 사이의 증가율은 전업농 13.0%, 1종 겸업농 32.5%, 2종 겸업농 31.9% 증가로 나타나 겸업화가 평균 농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했음을 보여줌

그림 8. 전·겸업별 농가수 및 농가소득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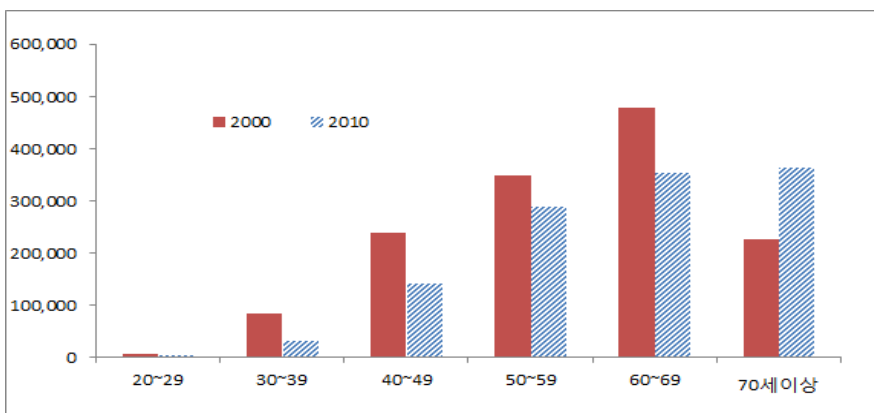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,kostat.go.kr)

4. 농가의 노령화와 소득격차의 심화

□ 농가의 경영주 연령의 최빈치가 70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평균 소득의 증가속도 둔화

- 2000년 총조사에서는 60대가 경영주의 최빈(最頻) 연령대였으나 2010년 총조사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바뀌
- 70세 이상 농가는 2000년 22만 호에서 2010년 36만 호로 증가하여 전체 농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6.3%에서 30.9%로 크게 증가

그림 9.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



자료: 통계청 농업총조사(www.kosis.kr)

- 농가 경영주 연령이 50대인 농가의 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, 최저 소득과 최고 소득의 격차는 더 확대되었음
 - 2003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평균 소득은 1천 7백만 원에서 3천 3백만 원 사이에 분포하였지만, 2013년에는 2천 2백만 원에서 5천 4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음
- 비중이 가장 큰 70세 이상의 농가소득은 10년 사이 26% 증가에 그쳐 소득수준도 낮고 증가속도도 가장 완만하였음
 - 30대(66%), 40대(47%), 50대(55%), 60대(39%)
-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 농가의 비중 증가에 따라 농가 전체의 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효과 발생

“
경영주 연령분포에서
70세 이상이 최빈
연령대로 변화,
연령별 소득 격차는
확대
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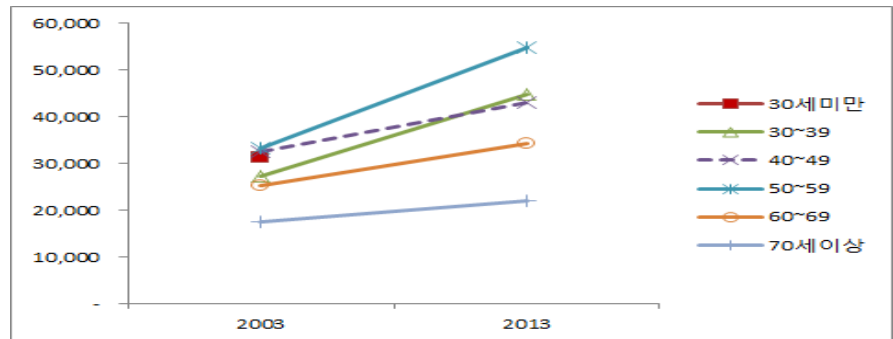


“
도시근로자가구와
비교하여
전 연령대에서
농가소득이 낮고
등락폭이
크다는 점에서
안정적 소득원
개발에 투자 시급

”

그림 10.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(10년간)

단위: 천 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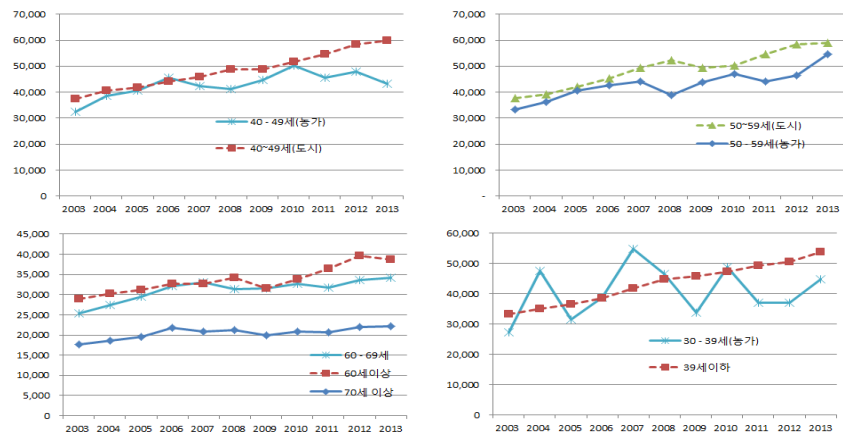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□ 경영주 연령 50대의 농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

- 전반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경영주가 50대인 농가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소득증가 속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
 -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농가의 소득하락은 2010년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축산업이 어려웠다는 점과 10년 전의 30대 후계농들이 40대로 분류되는 코호트 효과로 해석됨
-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평균 소득에서 농가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함

그림 11.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연령별 비교

단위: 천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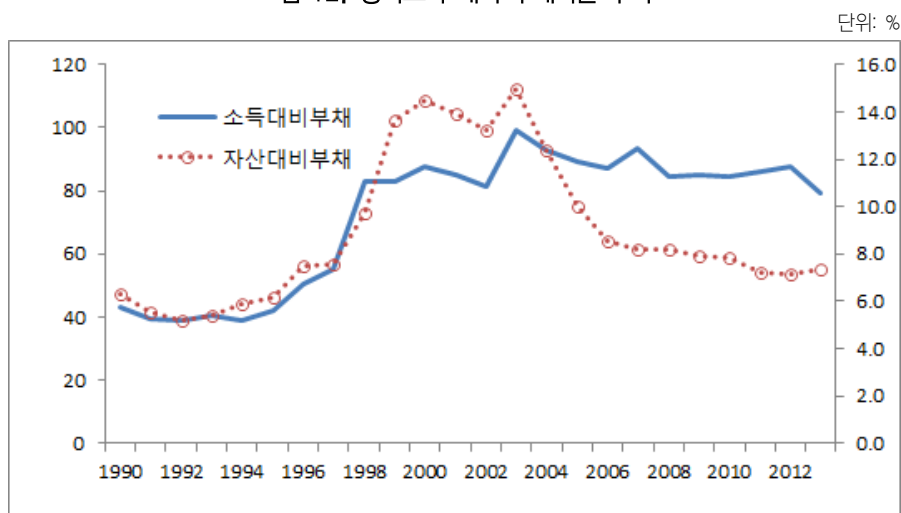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 농가경제조사, 가계동향조사(www.kosis.kr)

5. 농가경제의 안정성

▣ 농가부채의 증가 추세가 꺾이면서 농가경제의 안정성은 개선

- 농가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던 부채는 2007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고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200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- 농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0%를 상회하여 매우 위험한 그룹으로 분류되는 농가의 비율은 2003년 9.6%에서 2013년 3.9%로 감소하였고, 부채비율 40% 이상은 16.4%에서 7.6%로 감소
- 따라서 농가소득이 정체되었던 최근에 있어서도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임

그림 12. 농가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 농가경제조사(www.kosis.kr)

표 1. 농가자산 대비 부채비율 농가 분포

	부채비율>0.2	부채비율>0.4	부채비율>0.7
2003	28.9	16.4	9.6
2013	15.0	7.6	3.9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“
 농가부채비율은
 2013년 7.3%로
 2003년 15.0%에
 비해 50% 이상 하락,
 농가안정성 개선
 ”



“

절대빈곤선 이하
농가비중 15.9%에서
27.6%로 크게 증가,
70대 농가 1/3은
복지대상

”

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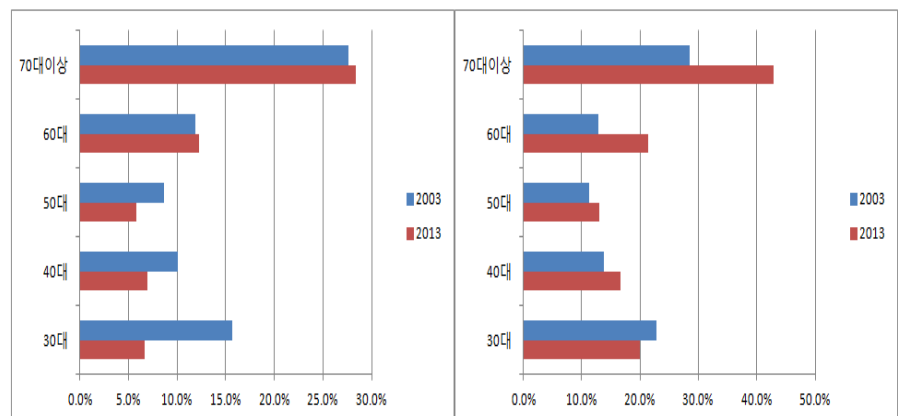
농외소득을 올릴 수
있는 가능성이 높은
젊은 연령층에서
절대빈곤농가의 비중
감소

”

□ 절대빈곤선 이하 농가는 증가하여 사회정책의 강화 필요성 시사

- 절대빈곤선인 3인 가구 최저생계비¹⁾ 이하 농가는 2003년 5.9%에서 2013년 27.6%로 크게 증가
 - 이 중 절대빈곤 농가라 보기 힘든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²⁾를 제외하더라도 이들 농가의 비중은 14%에서 17%로 증가
-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영농실패의 경우를 포함한 경우는 3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, 영농실패를 제외하면 30대에서 50대의 연령대에서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은 감소
- 70대 이상 농가에서 빈곤농가 비중은 2003년, 2013년 모두 28%정도로 나타나 70대 이상 고령 농가의 1/3 가까이는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
 - 영농실패로 저소득 농가로 분류된 농가를 제외하면 절대빈곤 농가의 대부분을 70대 이상이 차지
-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농촌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

그림 13. 연령그룹별 절대빈곤 농가 비중: 영농실패 제외(좌) 및 영농실패 포함(우)의 경우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1) 절대빈곤선: 최저생계비(2003년 월 81만 원, 2013년 월 126만 원)

2) 소득은 낮지만 농업자본액을 지가로 환산하여 경지규모에 더해서 구한 표준영농규모가 1.0ha를 넘어서 일시적인 영농 실패 때문에 저소득 농가로 분류된 경우

- 반면 40~50대 농가의 경우 영농실패를 제외하면 절대빈곤 농가 비중이 감소하였으나, 영농실패를 포함하면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영농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과 영농실패 후 회생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

□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다소 감소

- 농가가 사회적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수준에 있을 경우 농가경제는 적극적 의미에서 안정적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임
 - 이에 반해 농가경제가 안정성을 재무적 기준(부채비율 등)으로 보는 것은 '가난하더라도 빚이 없으면 안정적'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극적 안정성 판단이라 할 수 있음
- 농가 중 70세 이상의 농가와 0.5ha 미만의 영세농을 제외³⁾했을 때,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이상인 농가는 2003년 15.0%에서 2013년 13.1%로 하락
-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 이상을 올린 농가의 표준영농규모 평균은 2003년 1.56ha에서 2013년 3.8ha로 상승하였고, 이들 농가의 평균 소득은 5,920만 원에서 9,470만 원으로 크게 증가
 - 40대, 60대 농가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, 이후 동력을 잃고 정체되거나 하락
 - 이들 농가 중 40대의 비중은 2003년 29%에서 2013년 10%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후계인력의 유입이 감소되었기 때문
- 평균 표준영농규모가 작음에도 도시근로자가구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농외소득이 많기 때문임
 - 이들 농가 중 2종겸업 농가의 비중은 2003년 20%에서 2013년 30%로 증가,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6%에서 31%로 증가

“

지속가능선 이상
농가의 비중이
15.0%에서 13.1%로
하락, 특히
논벼농가는
20.2%에서 6.3%로
감소

”

3) 고령농과 영세농을 포함하여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는 관점에서 70대 이상 농가와 표준영농규모 0.5ha 미만을 제외하였음



표 2. 지속가능선 이상 농가의 소득 및 영농규모

단위: %, 천 원, h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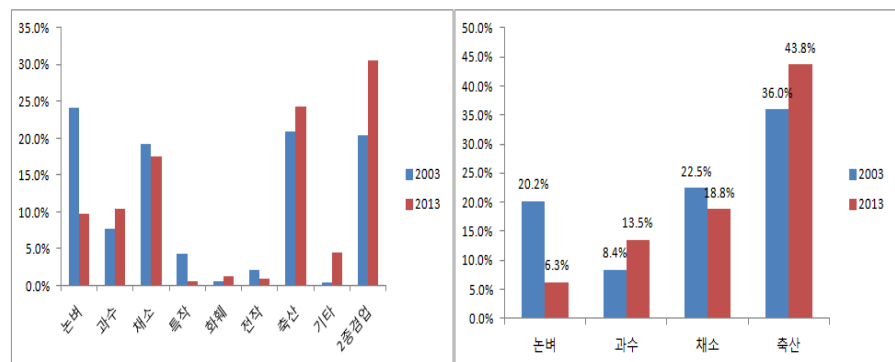
	비중	평균 농가소득	평균 농외소득	평균 표준영농규모
2003	15.0	59,200	15,500	1.56
2013	13.1	94,700	30,300	3.8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“
농업소득만으로
도시근로자
가구소득을
따라잡기는 어려운
것으로 보임

-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과 농업소득을 비교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003년 5.8%에서 2013년 3.9%로 감소
- 영농형태별로는 논벼농가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비중이 2003년 20.2%에서 2013년 6.3%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
- 2013년 도시근로자소득만큼 농업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영농규모가 5.8ha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
 -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평균농업소득은 1억 1천 6백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져 그동안 대규모 소득농가의 확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
- 2010년 경지규모 5ha이상 농가 비중은 3.3%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도농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농업소득만으로 도시근로자가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

그림 14. 지속가능선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: 농가소득 기준 지속가능 농가(좌) 및 농업소득 기준 지속가능(우)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(mdss.kostat.go.kr)

6. 정책적 시사점

□ 규모화 정책으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최대규모 농가 소득은 정체

- ‘규모의 경제’ 효과는 7ha 이하까지만 나타났고 이는 농업소득 정체가 원인
 - 농외소득에 대한 정부정책 효과는 대부분 경지규모 구간에서 긍정적이었지만, 농업소득정책 효과는 7ha 이상 대규모 농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

□ 전업농이 감소한 만큼 2종 겸업농이 증가하면서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

- 10년 사이 전업농 비중은 11.9% 포인트 줄었고 2종 겸업농 비중은 11.7% 포인트 증가
 - 전업농의 소득은 13.0% 증가한 데 반해 2종 겸업농의 소득은 31.9% 증가

□ 빈곤층 농가의 누적 추세 복지정책 강화 필요

- 60~70대 농가의 일정 부분은 절대빈곤선 이하 극빈계층으로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들 농가의 숫자는 누적

□ 40~50대 빈곤층 감소, 농촌지역 일자리정책 유효

- 절대빈곤선 이하 영세규모 농가(1.0ha 미만) 중 40~50대 젊은 농가 비중이 감소한 것은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

□ 농업경영리스크 관리 정책의 강화

- 영세규모가 아닌 절대빈곤선 이하 농가, 즉 영농실패로 인한 소득하락 농가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농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소득원 개발정책 강화

-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농가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와 50대 연령층에서는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도시근로자가구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필요경영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 규모화 정책과 농외소득원 개발의 병행을 강화할 필요



2014년

-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, 정책적 시사점(김미복, 박성재)
-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(송미령, 권인혜)
-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(김태훈, 승준호, 박동규)
-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(박기환, 김태훈, 지인배, 최병옥, 박동규)
-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(문한필, 정민국, 남경수, 정호연)
-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(박준기, 김미복)
- 제89호 한·EU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, 정민국)
-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(송미령, 성주인, 김광선, 조미형)
-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(이요한, 석현덕, 구자춘)
- 제86호 한·칠레 FTA 10년, 농업분야 이행평가(문한필, 정호연, 김수지, 김영준)
- 제85호 한·미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정민국, 문한필, 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)
-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(허덕, 한봉희, 김형진, 이형우, 김진년)
-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(황의식, 이계임, 송미령)

2013년

- 제82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(정정길)
-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(정호근, 권오복, 석현덕)
-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(석현덕, 문지민, 박소희)
-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(서대석, 노호영, 이금호, 이형용, 한은수)
-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(허덕, 이형우, 김원태, 김형진, 한봉희)
-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(이요한, 석현덕, 한기주)
-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(박동규, 승준호)
-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(석현덕, 박소희)
-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송주호)
-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(허덕, 우병준, 이형우, 김태우)
-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(석현덕, 안선진)
-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(이용선, 우병준, 서대석, 승준호)
-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(김태곤, 허주녕, 양찬영)
-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(정호근, 석현덕)
-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(권태진, 임수경)
-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(박시현)
-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·군별 농업경쟁력 평가(이병훈, 윤종열, 윤영석)



-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(석현덕, 안선진)
- 제62호 한·EU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문한필, 이현근, 남기천)
-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(성명환, 박지연, 정원희)
- 제60호 창조경제,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(박준기)
-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(성명환, 윤재웅)
-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(박기환)
-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(정원호, 최경환)
-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(송미령)
-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(정호근, 박소희, 석현덕)
- 제53호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(김용렬, 정학균, 민자혜)
-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(김성우, 노호영)
- 제51호 한·미 FTA 발효 1년, 농업부문 영향 분석(정민국, 문한필)
-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(박기환)
-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(김연중, 한혜성)
-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(지인배, 허덕, 송우진, 우병준)
-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(김용렬, 박시현)
-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(박현태, 박기환)
-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(정민국)
-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(석현덕, 장철수, 민경택, 정호근)
-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강창용)
-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(김용렬, 성주인)
-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(강창용)
-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(이계임, 이동소)
-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박준기)

2012년

- 제38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(정원호)
-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황운재)
-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(서대석, 이형용, 권희민, 이용선)
-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(송우진, 정민국)
-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(성명환, 한석호, 승준호, 신승희)
- 제32호 도시농부: 도농상생의 가교(김태곤, 허주녕, 김예슬)
-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(김용렬, 윤유식)
-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최병옥, 승준호)



-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(한재환, 신유선, 이미숙, 윤종민, 이용선)
-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(이병훈, 윤영석)
-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·중 FTA에 대한 시사점(최세균, 전형진, 정대희)
-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(김동원, 이병훈, 김광선, 박혜진)
-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(정호근, 조국훈)
-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(국승용)
-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(정민국, 우병준, 김원태)
-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(권태진, 남민지)
-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(성주인, 채종현)
-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(박대식, 마상진)
-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(문한필, 전형진)
-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17호 한·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(어명근)
-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(김성우, 한은수, 김명환)
-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(김광선, 채종현, 윤병석)
-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13호 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(김정섭, 성주인, 마상진)
-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(최경환)
-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(황의식, 김동훈)
-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(채광석)
-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(최세균, 정대희)
-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(박대식, 마상진)
-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최지현, 국승용, 박시현)

2011년

- 제 5호 2011년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 4호 한·미 FTA,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(최세균)
-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
-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- (문한필, 김경필, 어명근, 전형진)
-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(한석호, 승준호)
-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(이용선, 서대석)

KREI 농정포커스 제95호

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, 정책적 시사점

등	록	제6-0007호(1979. 5. 25.)
인	쇄	2014. 10. 10.
발	행	2014. 10. 10.
발	행	인 최세균
편집	위원	박성재, 김병률, 박준기, 성주인, 한석호
발	행	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		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
		02-3299-4000 http://www.krei.re.kr
인	쇄	(사)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
		02-2269-5523~4 dec5523@hanmail.net

ISBN: 978-89-6013-639-7 93520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